

디지털자산

6 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5월은 클래리티 법안 입법 진전, 스테이블코인 규율 정비,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는 토큰증권 하위법규 마련과 인프라 설계 논의가 구체화됐으며,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디지털자산 정책을 결제-은행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했습니다. 6월은 주요국의 핵심 입법·규제 일정이 집중되며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DIGITAL ASSET

| Contents |

핵심요약	03
I. 5월 국내외 정책 동향	05
1. 미국: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07
2. 일본: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 편입	08
3. 영국: 토큰화 금융시장 구축 위한 공동 로드맵 착수	09
4. 폴란드: MiCA 이행법 하원 통과	10
5. 한국: 금융위, STO 하위법규 7월 공개 예고	11
II. Key Issue: 美 행정명령 14405호	12
1. 美 행정명령 14405호	13
2. 전망	14
III. 6월 주요 일정	15
1. 6월 주요 이슈 전망: 국내	17
2. 6월 주요 이슈 전망: 해외	18

핵심 요약

5월 해외 리뷰: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구체화

5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정책은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 입법 진전, 일본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완화, 영국의 토큰화 로드맵 수립, 유럽의 MiCA 집행체계 구축 등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에서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가결하며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 SEC·CFTC 감독권 배분, 스테이킹 및 비수탁 서비스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입법이 본궤도에 올랐다. 다만 본회의 통과, 추가 재조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일본은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해 등록 사업자의 중개·유통을 허용함으로써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활용 기반을 마련했다. 영국은 FCA와 영란은행이 공동 의견수렴을 통해 토큰화 증권의 상용화와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며 기관 중심 토큰화 시장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는 MiCA 이행법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사업자 인가·감독 체계를 구체화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5월 국내 리뷰:
토큰증권 제도화 시행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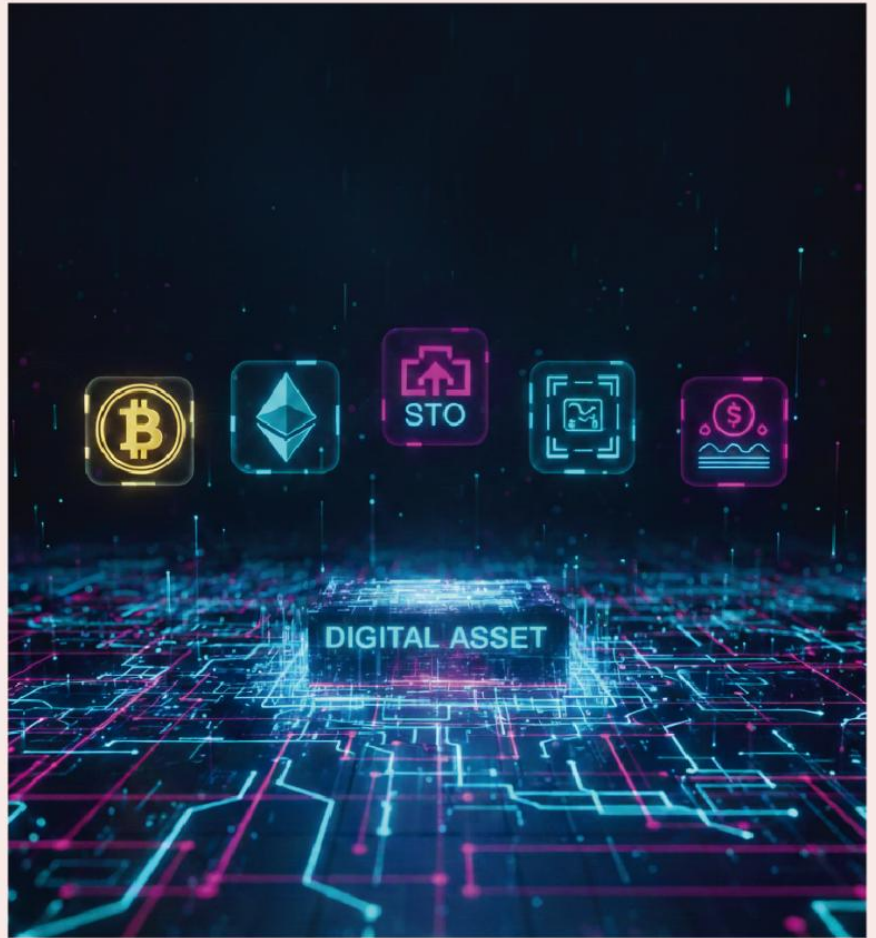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법의 세부 제도를 담은 하위법규와 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발행 부문에서는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구조를 일정 범위 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치평가·리스크 관리·공시 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과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를 논의했으며, 초기 시장 활성화를 고려한 규제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채권·MMF 등 기존 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적 인프라 구축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Key issue:
미국 행정명령 14405호

5월 19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05호(EO 1440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親디지털자산 정책을 결제·은행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한 조치로, EO 14178·GENIUS법과 함께 디지털자산 기업의 금융 인프라 접근 확대를 추진하는 흐름에 위치한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결제망 접근 문제로, 기존에는 은행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스터계정의 개방 가능성을 정책 의제로 공식화했다. 연준은 후속 조치로 제한적 결제망 접근을 허용하는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제도를 제안했으며, 최종 정책 방향은 2026년 말~2027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수혜 후보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자산 수탁기관이며, 장기적으로는 토큰화 증권 인프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EO 14405는 연준에 대한 강제 명령이 아니라 정책 검토 요청에 가깝고, 실제 계좌 개설 권한도 개별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하고 있어 제도 변화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6월 전망:
하반기 제도화 방향 결정할
핵심 일정 집중

6월은 한국·미국·일본·EU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일정이 집중되며 하반기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내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여부가, 미국은 SEC의 디지털자산 세이프하버 규정 공개가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상품 규제 체계로 편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EU는 디지털유로 입법 협상과 MiCA 전환기 종료를 통해 통합 규제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I

5월 국내외 정책 동향

[표1] 5월 디지털자산 정책 동향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진행 단계	내용
미국	2026.05.14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마크업 통과	상원 은행위가 디지털자산 클래리티 법안을 15대 9로 가결, 본회의 회부. ① SEC-CFTC 관할 구분(디지털상품 CFTC-증권형 SEC) ② 네트워크 토큰 개념 도입 및 스테이킹 유형별 차등 적용 ③ 거래 통제권이 없는 비수탁 소프트웨어 개발자노드 운영자-검증자의 단순 코드 개발-인프라 제공 행위는 송금업으로 보지 않고, 별도 인가등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④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지급 제한 유지. 백악관은 7월 4일 서명 목표 제시
	2026.05.19	핀테크 규제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대통령 서명	트럼프 대통령이 '금융기술 혁신의 규제체계 통합' 행정명령에 서명. 디지털자산-혁신 금융기술을 전통 금융-결제 시스템에 편입하기 위해 ① 연방 금융규제기관에 규정감독 관행-인가 절차 재검토를 지시하고 ② 연준에는 비은행 금융회사(디지털자산 사업자 등)의 연준 지급결제-결제서비스 접근 체계 평가를 요청
	2026.05.20	연준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도입 규정안 공개	규정안 의견수렴(60일)	연준이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도입 규정안 공개, 60일 의견수렴 개시. 마스터 계좌보다 권한이 제한된 스키니 마스터 계정으로, Fedwire-FedNow 등 주요 결제망 접근은 허용하되 지급준비금 이자, 할인창구, 일중산용 등 은행 기능은 미제공. 최종 규칙 확정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중 전망
한국	2026.05.15	토큰증권 세부 제도	협의회 운영-7월 발표 예정	금융위가 토큰증권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조각투자 제도화 하위법규-가이드라인 7월 발표 예고
일본	2026.05.19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취급 기준	규정 발표(6월 1일 시행)	금융청이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준비자산을 신탁 구조로 관리하는 형태, USDC 등이 해당)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규정 발표(6월 1일 시행). 금융상품거래법상 신탁수익권=증권으로 분류돼 유통이 막혀 있던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일본 내 등록 전자결제수단 취급업자의 매매-중개 대상으로 편입
영국	2026.05.18	토큰화 시장 공동 비전 제시	의견수렴 개시	금융감독청(FCA)과 영란은행이 홀세일 금융시장(wholesale markets) 토큰화 도입을 위한 공동비전 발표. 토큰화 증권-담보-결제수단 관련 규제-인프라 명확성 제고와 연내 로드맵 수립 추진
	2026.05.19	영란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정 방향 제시	규제 초안 공개 예정	영란은행,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수정 방향 시사. ① 개인별 보유한도(개인 2만 파운드, 기업 1천만 파운드) 폐기 후 발행자별 발행 잔액 한도(aggregate issuance cap)로 전환 검토 ② 6월 수정 규제안 초안 공개 ③ 연내 최종 Codes of Practice 확정 및 발행자 신청 접수 개시 목표. 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영란은행-금융감독청(FCA) 공동 규제, 비시스템적 스테이블코인은 FCA 단독 규제
폴란드	2026.05.15	MiCA 이행 디지털자산시장법안 (Crypto-Assets Market Act)	의회 통과	폴란드 하원이 EU MiCA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Crypto-Assets Market Act) 통과. 금융감독청(KNF)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거래소-커스터디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의 인가-감독 체계와 기존 사업자 전환 규정을 마련. 인가 사업자는 최근 3개 회계연도 평균 총수입의 최대 0.4%, 최소 500유로를 연간 감독분담금으로 납부하며, 무허가 영업-규정 위반 시 행정-형사 제재와 도메인 차단 조치 적용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 미국: 클래리티 법안 상원 은행위 통과

클래리티 법안,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정립과 비수탁
생태계 보호를 제도화

2026년 5월 14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을 15대 9로 가결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공화당 위원 13명 전원과 민주당 2명이 찬성한 초당적 표결로,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 통과(294대 134)에 이어 상원 첫 관문을 넘었다. 백악관은 7월 4일 서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첫째, 디지털자산에 대한 SEC와 CFTC의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큰을 디지털상품으로 분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둘째, 네트워크 토큰 개념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방 증권법상 비증권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셋째, 스테이킹은 셀프 스테이킹, 비수탁형 위임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 수탁형 스테이킹 서비스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고, 검증자와 노드 운영자의 역할도 별도로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수익 지급 규제를 지니어스법보다 넓게 규정했다.

디파이·오픈소스 개발 등 비수탁(non-custodial) 부문에 대한 규제도 명확해졌다. 고객 자산을 수탁·통제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프로토콜 개발 활동은 금융중개행위와 구분해 취급하고, 이용자의 자기수탁 권리도 명시했다. 또한 채굴자, 검증자, 노드 운영자 등 네트워크 참여자의 기술적 활동을 금융서비스와 구분함으로써 디파이와 오픈소스 개발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시장구조 법제화는
가시화됐지만, 최종 통과와
후속 규정 마련이 남은 과제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쟁점이 남았다. 민주당 수정안 일부가 상정되지 못하면서 반발이 제기됐고,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사업 이해관계 보유를 제한하는 윤리 수정안은 부결돼 향후 본회의의 쟁점으로 남았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 규제 범위다. 지니어스법이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반면, 클래리티 법안은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전반으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6월 상원 보고 안에서는 절충안이 반영돼, 단순 보유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은행예금과 경제적으로 동등한 수익 제공은 금지하되, 결제·정산·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등 실질적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SEC·CFTC·재무부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시행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SEC·CFTC 감독권 배분이라는 핵심 쟁점을 입법으로 정리하려는 첫 종합 시장구조법안이다. 다만 백악관이 제시한 7월 4일 서명 일정의 현실성은 본회의 60표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공화당 53명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필리버스터를 넘기 위해서는 민주당 7명의 추가 찬성이 필요하며,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의 조정, 하원안 재협의 등이 남아 있다. 7월 중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제도 운영은 SEC·CFTC의 후속 규칙 제정과 인증 체계 구축을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표2] 클래리티 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할 구분	디지털상품 → CFTC, 증권 → SEC
네트워크 토큰	원칙적으로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
스테이킹	스테이킹을 셀프·제3자위임·유동성·수탁형으로 구분, 검증자·노드 운영자는 인프라 제공자로 분류
개발자 자기수탁	코드만 작성·배포하는 개발자는 비중개자, 자기수탁 권리 보장
스테이블코인 이자	단순 보유 이자 금지(발행사 넘어 전 사업자로 확대) + 활동 기반 보상 허용

자료: 클래리티 법안 초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일본: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수단 편입

일본,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

2026년 5월 19일 일본 금융청(FSA)은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금결제법상 '전자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내각부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 규정은 6월 1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은 2026년 2~3월 실시된 공개 의견수렴(16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해당 자산은 금융상품거래법(FIEA)상 유가증권이 아닌 전자결제수단으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자결제수단 등 취급업자는 해외 발행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의 매매·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해외 발행사가 국내 취급 대상이 되려면 네 가지 동등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발행자는 일본의 은행·결제 관련 규제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해외 법령에 따라 인가를 취득하고, 금융청(FSA)의 요청 시 감독 관련 정보 제공이 가능한 해외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둘째, 준비자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발행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에 상당하는 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경우 거래 정지 등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넷째, 신탁재산과 토큰이 동일 통화 표시 자산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청은 준비자산 구조가 일본 국내 신탁형 스테이블코인(특정신탁수익권)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신용위험, 가격변동위험, 유동성위험, 상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일본 내 취급 가능 여부는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신탁수익권으로 분류돼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해외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 체계 내로 편입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본 내 중개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해외 스테이블코인의 유통·결제 기반을 제도권 내에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일본 시장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및 중개 서비스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영국: 토큰화 금융시장 구축 위한 공동 로드맵 착수

FCA·영란은행, 토큰화
증권의 제도화·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추진

2026년 5월 18일 영국 금융감독청(FCA)과 영란은행(BoE)은 홀세일 금융시장 토큰화에 관한 공동 의견수렴(Call for Input)을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5년 7월 영국 정부가 발표한 「홀세일 금융시장 디지털 전략(Wholesale Financial Markets Digital Strategy, WFMDs)」의 후속 조치로, 토큰화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과 규제 원칙, 향후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견수렴은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당국은 여름 중 응답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말까지 범부처 차원의 토큰화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동 비전은 채권·주식·펀드 등 토큰화 증권을 중심으로 시장의 실험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FCA와 영란은행은 업계가 요구해 온 건전성 규제, 토큰화 담보, 결제수단 처리 원칙에 대한 감독 방향을 제시했으며, FCA는 고객자산(Client Assets Sourcebook, CASS) 규정의 적용 방식도 시장 의견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란은행은 별도 협의를 통해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eal-Time Gross Settlement, RTGS) 및 CHAPS(Clearing House Automated Payment System) 결제시스템 운영시간 확대와 함께 2028년 실시간 동기화 결제(synchronisation) 서비스 도입, 토큰화 자산 담보 활용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영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중심 논의를 넘어 기관·홀세일 금융시장 토큰화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증권 샌드박스(Digital Securities Sandbox, DSS) 참여 기업들이 토큰화 증권의 발행·결제 실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연내 발표될 범부처 로드맵은 향후 영국 토큰화 시장의 제도화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4. 폴란드: MiCA 국내 이행법 하원 통과

MiCA 이행 입법 재추진

2026년 5월 15일 폴란드 하원은 EU의 MiCA를 국내법으로 이행하는 법안(Crypto-Assets Market Act)을 241대 200(기권 0)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세 번째 입법 시도로, 앞서 2025년 12월과 2026년 2월 의회를 통과했던 유사 법안은 모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법안은 5월 21일 상원을 수정 없이 통과한 뒤 5월 22일 대통령에게 이송됐다.

법안은 MiCA가 회원국 재량에 맡긴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청("Komisja Nadzoru Finansowego, KNF)을 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rypto-Asset Service Provider, CASP) 인가 및 감독, 감독 수수료 부과, 행정·형사 제재, 기존 사업자의 전환 절차 등을 규정했다. KNF는 무허가 영업에 대한 제재, 계좌거래 차단, 영업 제한, 불법 서비스 도메인 차단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무허가 서비스 제공 시 최대 2,000만 PLN 벌금 또는 징역 8년, 감독 방해 시 최대 2,500만 PLN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입법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폴란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안 이송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서명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유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별도의 대안 법안도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 승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번 법안은 MiCA를 실제 감독·집행 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MiCA 제143조에 따른 기존 사업자의 전환기간이 2026년 7월 1일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통령 서명이 지연되거나 거부권이 재차 행사될 경우 폴란드 사업자의 CASP 인가 전환과 서비스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 한국: 금융위, STO 하위법규 7월 공개 예고

금융위, 토큰증권
하위법규 가이드라인 7월
공개 예정

2026년 5월 15일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토큰 증권 제도화법의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7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의 기술인프라·발행·유통·결제 세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발행 부문에서는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조각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이른바 ‘풀링(pooling)’ 구조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는 개별 기초 자산 단위 발행만 허용되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라는 전제 아래 상품 다양성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 가치평가, 리스크 관리, 공시체계 등 관련 요건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 부문에서는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요건, 경영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 구조 설계가 논의됐다. 특히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시장 형성 초기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표3] 국내 토큰증권(STO)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구분	주요 내용
2023.02.06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STO 허용 방향 제시)
2026.01.15	토큰증권 제도화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3.04	금융위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발족
2026.05.15	협의체 2차 회의, 하위법규 가이드라인 7월 발표 예고
2026.05.15	하위법규 개정안 가이드라인·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발표(예정)
2027.02 예정	토큰증권 제도화법 시행(예정)

자료: 언론 보도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II

Key Issue: 美 행정명령
14405호

1. 美 행정명령 14405 호

디지털자산에서
결제 인프라로 확장되는
정책 기초

2026년 5월 19일 서명된 행정명령 14405호(EO 1440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결제-은행 인프라 영역까지 확장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책의 출발점은 2025년 1월 EO 14178(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은행 접근 확대를 지지하고 CBDC 추진을 금지했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PWG)을 설치했다. 이후 PWG는 2025년 7월 규제-입법 권고안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고, 같은 해 8월 행정명령 14331호(EO 14331)은 금융기관 감독 과정에서 활용되던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 개념을 축소하며 이른바 '디뱅킹(debanking)' 문제 해소를 추진했다. 여기에 2025년 7월 제정된 GENIUS 법이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자산 규제에서 금융 인프라 개방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연방준비제도(Fed) 결제망 접근 문제다. 특히 마스터 계정(Master Account)는 Fedwire, FedNow 등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좌로, 그동안 예금보험 대상 은행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대표적으로 Wyoming 특수목적예금기관(SPDI)인 Custodia Bank는 수년간 마스터 계정 취득을 시도했으나 법원은 연준이 적격 기관에 대해서도 계좌 개설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026년 3월 Kraken Financial은 제한적 형태의 연준 계좌를 승인받으며 디지털자산 기업 최초의 직접 접근 사례를 만들었다. 다만 할인창구, 지급준비금 이자 등 핵심 기능은 제외돼 완전한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주목할 부분은 EO 14405 발표 직후 연준이 '결제 계좌(Payment Account)' 제도를 제안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마스터 계정보다 권한이 제한된 일종의 '스키니 마스터 계정'으로, Fedwire와 FedNow 등 주요 결제망 접근은 허용하되 지급준비금 이자, 할인창구, 일중신용 등 은행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 구조다. 연준은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 정책 방향은 2026년 말 또는 2027년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O 14405가 곧바로 비은행 기관의 연준 결제망 접근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자산 기업의 중앙은행 결제 인프라 접근을 정책 의제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4] 트럼프 2기 행정부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행정명령

행정명령	일자	내용
EO 14178	2025.01.23	트럼프 2기 디지털자산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디지털자산 기업의 은행 서비스 이용 보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추진 금지.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PWG) 신설, 규제 강화 기초였던 바이든 행정부의 EO 14067 폐지
EO 14233	2025.03.06	형사 몰수 등으로 연방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전략 비트코인 비축자산'으로 보유. 그 외 압류 디지털자산은 별도 '디지털자산 스톱파일'로 분리 관리. 재무부에 관리 조직 설치 및 납세자 부담 없는 추가 취득 방안 검토 지시
EO 14330	2025.08.07	401(k)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모펀드-부동산-원자재-디지털자산 관련 투자수단 등 대체자산 접근 확대를 위해 노동부와 SEC에 규제-지침 재검토 및 세이프하버 도입 검토 지시
EO 14331	2025.08.07	감독기관이 은행 건전성 평가에 활용하던 '평판위험(reputational risk)' 항목 삭제. 이를 근거로 디지털자산 기업 등 특정 고객의 계좌-거래를 거절해 온 '디뱅킹(debanking)' 관행 금지, 과거 사례 재검토 지시
EO 14405	2026.05.19	예금보험 대상 은행에만 열려 있던 연준 결제망(Fedwire-FedNow 등)을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에도 개방하는 방안 검토 지시. 연준에 무보험 예금기관-비은행 기업의 지급결제 계정 접근을 평가해 120일 내 보고하도록 요청

자료: 백악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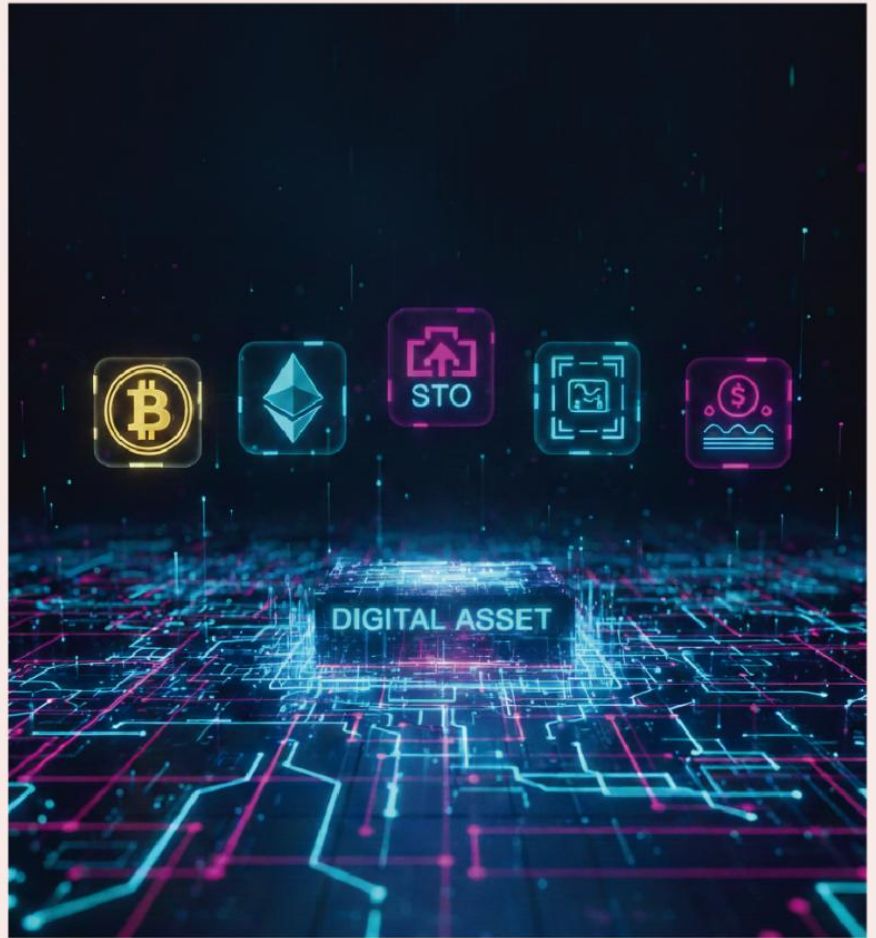
스테이블코인·거래소·토큰화
증권 인프라의 수혜 가능성

EO 14405의 직접적인 수혜 후보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자산 수탁기관, 핀테크 결제사업자다. Circle, Ripple, Paxos, BitGo, Fidelity Digital Assets 등은 이미 OCC의 국법신탁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Coinbase·Kraken·Anchorage 등도 향후 연준 결제망 접근 확대 시 수혜가 기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준 결제 인프라와 연결될 경우 발행·상환 과정이 간소화되고 결제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토큰화 증권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최근 SEC는 토큰화 증권 관련 제도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Nasdaq과 DTCC도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토큰화 증권 유통이 동일한 결제 인프라 위에서 연결될 경우,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시장 간 통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제도 변화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EO 14405는 연준에 대한 강제 명령이 아니라 정책 검토 요청에 가깝고, 실제 계좌 개설 권한 역시 개별 연방준비은행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Custodia 판례가 보여주듯 연준은 마스터 계정 부여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결제 계좌 제도 설계와 Tier 3 기관 심사 재개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의미는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GENIUS법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EO 14405는 디지털자산 기업의 결제 인프라 접근이라는 다음 단계의 의제를 제시했다. 향후 연준 정책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거래소, 토큰화 증권 인프라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III

6월 주요 일정

[표5] 6월 디지털자산 정책 동향

국가	날짜	정책 및 법안	내용
미국	2026.06~08 예정	클래리티 법안 상원 본회의 표결 추진	농업위(1월 29일)·은행위(5월 14일) 통과안 병합 단일안 표결 추진. SEC-CFTC 관할 구분, 토큰 분류,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 등 핵심 쟁점 심사. 6월 1일 상원 입법 캘린더 등재, 표결일 미확정. 필리버스터 저지 60표(민주 7명)·대통령 이해상충 조항 합의가 관건. 백악관은 7월 4일 서명 목표이나, 상하원 법안 조정(reconciliation) 절차 감안시 8월 내 통과가 현실적
	2026.06 예정	SEC, 디지털자산 전용 규정 패키지 (Regulation Crypto Assets) 공개	OIRA(백악관 규제 심사 기관) 심사 단계 지속. 3월 20일 SEC가 디지털자산 전용 규정 패키지(Regulation Crypto Assets)를 OIRA에 제출, 스타트업 면제·자금조달 면제·투자계약 세이프하버 도입 포함. OIRA 심사 통상 90일 한도로, 순조로울 경우 6월 중 공식 규정 공개 전망
한국	2026.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재개	6월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 완료, 정무위 등 후반기 원구성 협상 진행 중. 원구성 완료 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우선입법 추진 전망.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은행 지분 51% 룰)·건전성 요건, 거래소 소유구조가 핵심 쟁점
EU	2026.06.23	EU 의회 ECON(경제통화위) 디지털유로 법안 표결	디지털유로 법안(COM/2023/369) 경제통화위원회 보고서 채택 표결 예정. 통과 시 이사회·집행위와 3자 협상 개시. 당초 5월 5일에서 6월 23일로 연기
	2026.06 예정	ECB 디지털유로 파일럿 PSP(결제서비스 제공자) 선정 절차 진행	ECB는 디지털유로 파일럿 참여 PSP 모집을 마감(5월 14일)하고 신청서 평가를 진행 중. 선정 결과는 7월 발표 예정이며, 선정 PSP는 3분기부터 디지털유로 결제서비스 개발과 플랫폼 연동 테스트에 착수할 예정
	2026.06.30	MiCA 전환기 종료 직전 인가 마감	독일 BaFin(연방금융감독청) 등 회원국 인가 청구 마감. 7월 1일 전환기 완전 종료 후 미인가 CASP(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의 EU 서비스 제공은 EU법 위반, 추가 유예 없음
일본	2026.06 예정	FIEA(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통상국회 심의	자금결제법상 '결제수단'이던 암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로 편입. 거래소 상장 약 105종에 공시 의무, 내부거래 금지 등 불공정거래 규제 신설. 현재 통상국회 심의 중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6 월 주요 이슈 전망: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 재개

6월 5일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완료되면서, 그간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가 재개될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입법 시계의 본격 가동 여부는 정무위를 포함한 경제 상임위 원구성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법사위원장 협상이 맞물린 6월 중순이 후반기 국회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원구성이 조기 마무리될 경우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 속도가 붙을 수 있으나 협상이 장기화하면 비쟁점 법안까지 정기국회로 이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입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으로,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상장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사업자 범위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다. 여권은 정무위 등 경제 상임위 확보를 국정과제 입법 가속의 전제로 보고 있으며, 금융당국 역시 원구성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주요 처리 과제로 분류하고 있어 후반기 입법 추진 동력은 상반기 대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건전성 요건, 거래소 소유구조 등에 집중될 전망이다. 발행 인가의 진입 장벽과 관련해 은행 지분 51% 룰 도입 여부가 최대 변수로, 은행권 중심 발행 구조와 비은행·핀테크의 시장 참여 허용 범위를 두고 이견이 첨예하다. 이와 함께 발행 인가제 도입, 100% 준비금 확보 의무, 유동성·건전성 기준 등 세부 규제 수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거래소 규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초과 지분은 일정 유예기간 이후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 및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위헌 논란이 변수로 거론된다. 거래소 지분 한도와 발행 주체 요건, 준비금·건전성 기준이 시장 구조를 사실상 결정짓는 만큼, 6월 원구성 완료와 정무위 심사 일정이 제도화 논의의 핵심 트리거로 작용할 것이다.

2.6 월 주요 이슈 전망 해외

미국: SEC,
‘디지털자산
전용 규정 패키지
(Regulation Crypto Assets)’
6월 중 공개 전망

SEC의 디지털자산 전용 규정 패키지(Regulation Crypto Assets)가 현재 백악관 규제정보국(OIRA) 심사 단계에 있으며, 6월 중 공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규정은 2026년 3월 20일 OIRA에 제안규정으로 제출됐다. 이번 규정은 3월 17일 공개, 23일 발효된 SEC·CFTC 공동 해석지침을 토대로 한 세이프하버 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시 SEC는 토큰 분류체계와 함께 에어드롭, 프로토콜 채굴, 스테이킹, 래핑 자산 등에 대한 해석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초기 프로젝트가 일정 기간 완화된 공시 의무 아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면제(Start-up Exemption)' 제도다. 둘째, 12개월 이내 한시적 자금조달을 허용하는 별도 면제 규정이다. 셋째, '투자계약 세이프하버(Investment Contract Safe Harbor)'는 발행자의 핵심 경영 노력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해당 토큰이 증권성 판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향후 규정이 공개되더라도 연방관보 게재, 공개 의견수렴(notice-and-comment), 최종 채택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발효까지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규정이 시행될 경우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증권성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첫 포괄적 세이프하버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
통상국회 심의

일본은 암호자산(暗号資産)을 자금결제법상 결제수단 범주에서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로 편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청은 2026년 4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 법률안' 설명자료를 공개했으며, 현재 통상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암호자산에 대한 공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거래소 상장 105종 암호자산에 대해 발행주체, 기반 기술, 변동성 특성 등 주요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무등록 사업자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또한 암호자산교환업자를 '암호자산거래업자(暗号資産取引業者)'로 개편하고, 인사이더 거래 규제를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율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본은 암호자산을 기존 금융상품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주요국 중 하나가 되며, 공시·시장감시·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게 될 전망이다.

EU:
디지털유로 6월 23일
ECON 표결 및 MiCA
전환기 최종 종료

EU는 6월 디지털유로 입법과 MiCA 전환기 종료라는 두 가지 주요 정책 일정을 앞두고 있다.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ECON)는 6월 23일 디지털유로 법안(COM/2023/369)에 대한 표결과 함께 이사회·집행위원회와의 3차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2023년 6월 발의됐으나 의회의 협상 입장 채택이 지연돼 왔으며, 이번 표결 통과 시 본격적인 입법 협상이 시작된다.

한편 MiCA 전환기는 7월 1일 최종 종료된다. 독일은 전환기를 12개월로 단축 적용해 2025년 12월 31일 이미 종료했으며, 현재 남은 대상은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18개국 전환기를 적용한 회원국들이다.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회원국에서 MiCA 인가 없이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다. MiCA가 과도기에서 완전 시행 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향후 EU 디지털자산 시장이 단일 인가 체계 아래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6월 9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 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 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 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0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